

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부채 비율 개선은 국가의 부채 감당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-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치도 ‘국가재정운용계획상’ 지난해 ‘29년 기준 1,788.9조원 대비 129.8조원 낮아진 1,659.1조원으로 전망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10.7. 이데일리는 「韓 정부부채 비율 42.6%로 하락」 기사에서,
 - “이 같은 지표 개선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발(發) 부채 착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IIF의 진단이다.”, “높은 인플레이션이 명목 성장을 끌어올려 부채비율 상승을 억제한 ‘안정성 착시(Illusion of stability)’를 반영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경제성장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국가의 부채 감당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며, 이를 단순한 ‘착시’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 - 동일한 규모의 부채라도 경제규모와 소득·세입기반이 확대될수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, 국가부채를 경제규모인 GDP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. 명목 GDP 증가는 세입기반 확대와 재정여력 확충으로 이어져 국가의 부채상환능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.
 - 따라서, 성장에 따른 부채비율 하락을 단순한 ‘착시’로 보는 것은 경제 성장이 재정에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. 실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IMF·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입니다.

□ 또한, IIF는 인용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계 기준 국가부채비율이 감소하였지만 고금리로 인해 향후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글로벌 현상에 대한 일반론적 지적을 하였으며,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 국가부채비율은 경상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정부는 ‘책임있는 적극재정’ 원칙하에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고,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‘재정의 선순환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부채비율 전망의 큰 폭 개선은 국가의 부채감당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□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중입니다.

○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(D1)비율은 ‘27년 48.3%로 ‘26년 계획보다 3.3%p 낮아지며, ‘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△3% 이내, 국가채무비율도 40% 후반 수준*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%p 이상 개선
(기존 계획상 ‘30년은 ‘25~‘29 중기계획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)

< 25~29 국가재정운용계획 - 26~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비교 >

(조원, %)		'25		'26		'27	'28	'29	'30
		본예산	2차추경	본예산	추경				
국가채무 (GDP%)	'25~'29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-	-	1,532.5 (53.8)	1,664.3 (56.2)	1,788.9 (58.0)	-
	'26~'30	-	-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	1,519.8 (48.3)	1,600.3 (48.9)	1,659.1 (48.8)	1,734.1 (49.0)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제언에 귀기울이며,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확보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